

# 민주당 자생력은 '대통합'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추모 민심이 점차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대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 서거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추후 정국을 끌어 나갈 만한 내부 동력이 없다는 점에서 '대통합 선언'을 통해 돌아온 민심을 붙잡고 침체된 민주화 세력을 하나로 묶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구 민주-親盧-사회단체 연대해야”

### 당 내부서 제기... DJ도 강력 주문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형성된 민심을 바탕으로 지난 대선 및 총선 참패로 침체된 진보세력을 결집하는 '대통합 선언'에 나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신건 의원은 물론 구 민주계의 한화갑 전 의원, 친노 세력을 상징하는 이해찬 전 총리와 유시민 전 장관의 복당을 제의하는 한편 재야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민주당의 진로를 두고 “자기를 버리면서 (큰 틀로)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해찬,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오찬을 함께 하면서 “내가 크니까

7을 차지하고 나머지 3을 (연대에 참여하는 세력들이) 나눠 가지라는 식으로 해선 곤란하다”며 범야권 및 시민사회 진영과의 연대와 관련해 민주당의 발상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정치적 이해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정동영, 신건 의원의 10월 재보선이진 복당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해당 행위에 따라 올해 내의 복당은 어려운 현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이해찬 전 총리와 유시민 전 장관의 경우, 입당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한화갑 전 대표도 복당을 허용한다면 지난 4월 재보선에 출마한 한광옥 전 대표처럼

오는 10월 재보선에 나설 수 있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내년 지방선거와 전당대회에서의 대표 경선, 차기 대선 구도 등 당내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도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대통합 선언을 통해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력 대권 주자 및 새로운 비전 제시 등 내부 동력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통 큰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민심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우윤근 수석 부대표는 “현재 민주당에 요구되는 것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 인사 배제보다는 MB 정부의 독주에 맞설 수 있는 대통합의 모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與 “쇄신안 보고 후 정면 돌파” 野 “先사과 여부따라 전략 변화”

## ■李대통령 귀국 기다리는 정치권

6월 임시국회의 개회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방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귀국을 기다리며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쇄신안 보고와 이에 대한 청와대 측의 응답을 위해서 이 대통령의 귀국이 기다려지는 상황이다. 대통령 사과 등 5대 요구 조건을 내걸며 동원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야당의 요구조건을 무시한 채 무조건 동원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의 개회 조건을 수용할 경우 제2, 제3의 요구가 뒤따르는 등 야당에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이라 우려가 작용한 때문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7일 “자주 조건을 제시하면 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며 “앞으로 조건을 다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 일각에서는 ‘단독 국회 소집’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다음 주 중 국회가 열릴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귀국과 이후의 쇄신 방안을 통해 여야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민주당=한나라당이 민주당의 ‘5대 선결조건’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귀국 후 내놓을 사태 해결책을 지켜 본 뒤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여권에 목소리를 높여오다가 국회 공전 책임론에 대한 여론 부담 때문에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등원하는 것은 굴욕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은 한나라당의 직접 관할권을 벗어난 대통령의 고유영역인데다 특검과 국조 등도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한나라당만 바라보는 것은 무의미하다.

정세균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민심이반을 수습할 사람은 오직 이 대통령 한 사람 뿐”이라며 “근원적 처방이라는 것은 이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와 국정쇄신 뿐이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물론, 이 대통령 귀국과 수습책 발표가 바로 민주당 국회 동원의 조건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절충점을 찾아 등원해야 한다는 온건파가 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이 야당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할 정도의 수습책을 내놓을 경우 대야 강경 투쟁을 주장하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또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7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한나라당 지지율이 회복됐다고 말하고 있다. (왼쪽)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은 북핵문제 해법에 대한 성과를 기대했는데 실질적 성과는 전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국회 폭력 기소 편파적”

지난해 12월 국회 외통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의 상정을 둘러싸고 일어난 국회 폭력 사건과 관련,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기소되지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16일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대해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불

구속 기소한데 이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폭행 혐의로 각각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민주당이 회의 참석을 방해했다며 박진 외통위원장과 한나라당 위원 10명,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을 고발한 것은 무혐의 처리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에 대해 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편파성을 드러낸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날치기를 시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하지 않고 회의장에 들어가려던 사람만 문제 삼는다면 어떻게 정상적인 법치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검찰 개혁을 바로 해서 야당 탄압에 나서서 검찰을 바로 잡는데 모든 당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시의회, 시교육청 시정 질문

### 학교 급식 연내 직영 전환

○광주지역 학교 급식 시스템이 연말까지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된다.

광주시교육청은 17일 광주시의회 제179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조광항 의원(민주·비례)이 질의한 ‘학교 급식 직영화 계획’에 대해 “현재 교육청 관내 299개 급식 학교 중 위탁으로 운영 중인 13개교의 급식을 연말까지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와 관련 13개교 학교장으로부터 지난 3월 직영 전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직영 전환에 따른 급식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교육과학기술투입특별교부금을 포함해 총 35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학교 위탁 급식이 직영 급식보다 질과 안전성이 떨어져 직영 전환을 요구해왔다.

### 시의회 의사진행 미숙 ‘눈총’

○광주시의회의 미숙한 의사진행이 도마 위에 오르다. 시정질문 도중 의원과 집행부 간부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가 하면, 상임위원장이 신상발언을 통해 교육청 간부들의 자리배치 편의를 요청하는 등 의사진행에 허점을 드러냈다.

17일 광주시의회 제179회 임시회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이 신상발언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시에 비해 교육청 간부들의 좌석이 비좁다. 자리를 넓게 앉을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신상발언에 대해 시의회 안팎에서는 상임위원장이면 의사진행에 대한 비중있는 소견이나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이어야 하는데 “다소 생뚱맞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정당 지지율 우리가 더 높다”

### 한나라 “재역전 10% 앞서” 민주 “2주째 불변”

지난 4~5년 동안 한나라당은 지지율 문제로 민주당과 설전을 벌인 적이 없었다. 당연히 앞서고 있었고 그 차이가 상당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당 지지율이 역전당하자 지지율을 놓고 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거 정국이 가라앉으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 다시 재역전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

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일련의 조사를 보면 우리가 (지지율을) 재역전했고 10%포인트 이상 앞선 결과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한나라당은 32.9%, 민주당은 20.8%로 10%포인트 이상의 큰 격

차가 났다”며 “같은 기관의 지난 1일 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이 27%대 28%로 뒤져 있었다”고 소개했다.

물론, 민주당은 이 같은 한나라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지지율 역전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전날 당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ARS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현재 한나라당 지지율은 26.7%, 민주당은 35.3%”라고 전했다. 또 “지지만 주 35.5%, 지난주 35.3%로 민주당 지지율이 2주째 차이가 없다”면서 “특히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연구원 자체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한나라당 지지도를 역전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대학교  
 광주광역시 동구 동성로 100  
 전화: 010-990-0000  
 팩스: 010-990-0001  
 홈페이지: www.kwangju.ac.kr